

野 반대기류에 ‘일자리 추경’ 험로

與 “일자리 문제 시급...이달내 국회 처리를”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편성요건 안돼”

여권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가 요지부동인 상황여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선심성 지역예산, 적자 국채발행이 없는 ‘1유(有)3무(無) 추경’이라고 자평하며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민간에만 맡길 수 있는 한계가 상황 아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재정역량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추경의 범

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추경 요건인 ‘국가 재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의 확대 채용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과 교육·보육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최대한 (6월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여권은 ‘20일’내에 가진 역량을 총동원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정부위원회 등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등을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의 협조는 기대 낭만인 상황

이다. 야권은 추경 편성요건과 공공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일자리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최근 상황이 재난 상황이라 아니더라도 대량 실업에 해당되는지가 명확치 않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일회성 추경 편성이 앞으로 국가재정에 영구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안 통과로 얼어붙은 보수 야당과의 관계도 악재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물고 미래 세대에겐 천문학적 부담을 주지만, 검증조차 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부분 일자리 늘리기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하다”며 “중국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정부, 여당을 향해 “야당의 의견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추경 밀어붙이기에 나선다면 소통과 협치는 화중지병(畫中之餅, 그림의 떡이라는 뜻)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무원을 추가채용하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인 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이번 추경이 전성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면밀히 살펴볼겠지만 일단 바른정당은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상조 인준’ 고민 깊은 국민의당

당내 찬·반 분분...한국당·바른정당과 공조시 역풍 우려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때에도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보태면서 보수 야당들의 반대에도 임명동의안 처리가 이뤄진 바 있기 때문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김 후보자가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서 경제민주화에 평생 헌신한 점을 감안할 때 당의 입장을 심도 논의를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분위기가 당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가에서 채택으로 기울는 것이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자

유한국당이 이 총리 인준이 강행 처리됐다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정례회동 불참을 선언한 것을 두고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협치는 책임과 의무이자 국민의 존엄한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호남지역 민심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점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부적격 의견’을 못 박은 한국당과 바른정당과 공조할 경우, 오히려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해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의원 입각’ 후보자 14·15일 인사청문회

14일 김부겸·김영춘·도종환...15일 김현미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4~15일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5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오는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들 상임위는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다음 날 인사청문보고서의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각 상임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능력과 정책비전을 철저히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사의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차장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급격한 건강 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어 “김 차장은 현재 병원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일리수석에 내정했다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내정 단계에서 철회한 적이 있다.

김 차장은 지난달 24일 외교·통일·정보융합·사이버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에 임명돼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임명 이후 김 차장에 대한 연세대 교수 재직 시절의 품행과 관련된 제보가 잇따랐으며,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면밀히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인 김 전 차장은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외교·안보 분야 핵심 브라이언으로 활약해 왔다.

외교안보 전략과 실무를 맡았던 김 전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당권경쟁, 일단 홍준표-원유철 2파전

나경원·홍문종·황교안 등 거론

17일 후보 등록...7월3일 전대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선후보를 지낸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원유철 의원이 공개적으로 출마의지를 드러내면서 일단 당권경쟁 구도는 2파전으로 출발하는 분위기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 비교적 공개적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사람은 원 의원과 홍 전 지사 두 사람 뿐이다.

홍 전 지사는 귀국 다음 날인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패배에 대해 사죄드리고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전대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홍 전 지사는 당분간 전국의 당원과 당직자들을 만나는 낮은 행보를 하며 당권 도전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지사 측은 “대선이 끝난 직후에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고생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못 전했다”며 “이분들을 만나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홍 전 지사 측은 대선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곳이자 한국당의 전통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을 먼저 방



돌아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지난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의사가 흘러나왔던 원 의원에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교적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원 의원은 “이제 한국당 정치영토를 수도권과 청년층으로 확장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면서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당의 혁신·국민과의 소통·미래에 대한 새 비전을 만들어 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의 패인을 수도권 및 젊은 지지층 상실에서 찾으며, 50대의 젊은 나이와 수도권 지역 기반을 내세워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물론, 이들 외에도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는 원내외 인사들은 많다.

우선, 원내에서는 4선의 나경원·유기준·홍문종 의원이 거론된다. 원외에서는 김태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김형식·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신용한 대

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도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오는 17일 전당대회 출마 후보를 등록받고 19일부터 약 2주간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 방식은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해 별도 선출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당원과 일반국민의 여론을 각각 7:3으로 반영하는 기존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 1인 2,000만원 이상
-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